

정부가 발벗고 나선 스마트팜 성공 조건은

# 기술력 갖춘 대기업 참여 절실... 유통망 구축도 과제

농식품부, 4년내 혁신밸리 4곳 조성  
일자리 4800개 창출 등 정착 지원  
中·日·동남아 등 수출시장 확대해야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와 맞물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추



이낙연 총리가 지난 1월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업체인 ㈜농산을 방문해 파프리카 출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스마트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이 집적화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

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ha가 조성된다.

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운영을 비롯해 오는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원)도 결정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부처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 기준 시설원에 40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ha, 5750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화된 온실(약 1만500ha)의 70%, 축산 전업농(약 2만3000호)의 약 25%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전국의 시·도 대상으로 7월 13일까지 진행한 뒤 7월 말 2개 시·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물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1을 기록하는 등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다.

이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중견·대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손정의 서울대 교수는 "국내는 파프리카, 딸기 등 온실 위주로 ICT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떨어진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대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와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구조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판매 시장 확대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기영 강원대 교수는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느 시장에 팔 것인가가 문제"라며 "생산성을 올려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끼리 경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손정의 만난 백운규, 에너지투자 확대 요청

(소프트뱅크 회장)

(산업부 장관)

日 도쿄서 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의견 교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일본 도쿄에서 전력망 연계, 원전안전 및 해체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손정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협력,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지난 8년간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1/10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저장장치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백 장관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용 및 불안정성 문제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8일 일본 도쿄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왼쪽)을 만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에너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백 장관은 반도체·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소개하면서 소프트뱅크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손회장은 지난해 유니콘 기업 등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1000억 달러 규모로 출범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 투자를 위해 한국의 국부펀드, 연기금 등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oT, AI, 스마트 로봇 등 소프트

뱅크가 집중하고 있는 3대 투자분야를 설명하면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밝혔다.

백 장관은 손 회장 면담 이후 도쿄 가조엔 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원전 안전·해체 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폐물 관리, 해체 등 공동된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 민·관합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김영춘 장관, 印尼와 해양수산분야 협력

(해수부)

현지 초청... 12일까지 방문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사진)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양국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루훗(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저광물 등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



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협정 체결에 따라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는 올해 8월 중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항로 공동탐사,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은 수지 뿌지아스투티(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 이슈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비롯해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관광피해, 환경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기술교류 및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근로복지공, 복권기금사업 성과 4년연속 1위

취약계층 복지수준 제고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성과평가 결과,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1위(매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

라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1위 사업으로 평가 받게 됐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리로 용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복권기금2600억원 포함)이 지원됐다.

용자조건은 1년거치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8년 246만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및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을 위해 용자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정자금용자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업부,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접수

자동차·항공 등 모든 기술영역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을 이달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포상이다.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에게 포상하는 '산업기술진흥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한다.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올 11월 '2018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은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홍보·전시해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